



## 대학재정 실태와 재정 확보방안

염 재 호 |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21세기 국제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각국의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순위 평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전통적 대학교육의 성격을 대표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대학들도 전면적인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도 최근 SCI논문의 비약적인 증가현상과 아울러 대학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소위 세계 100대 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언론에서는 그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대학교육이 부실하여 신입직원을 선발하고 재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불평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대학에 대한

제대로 된 고등교육지원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현재 대학재정은 크게 등록금과 기부금, 그리고 연구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립대학의 재정규모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에서 60%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부분의 재원이 90%를 넘고 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0%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은 대부분 초·중·고의 교육재정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서 대학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예산도 60% 이상이 국립대학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 것도 대부분 대학정책지원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유도하는 프로젝트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이것에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모두 경쟁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 대학의 사학재정은 기존에 대

“

최근 사립대학은 정부의 정책지원금은 미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급감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총학생회 등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립대학들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

학지원율이 높을 때 국내 고등교육시장을 독과점하여 주로 등록금에 의존하여 충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사립대학은 정부의 정책지원금은 미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급감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총학생회 등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립대학들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재단이 아닌 사립대학의 재단에서는 대학에 지불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의 등록률이 저조하여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영세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과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역량이 되는 대학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대학교육은 엘리트 교육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대학이 없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미래의 지식사

회를 선도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미래의 경쟁력인 대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기피현상을 논의하면서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이공계 실험실의 교육여건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한다. 교육용 기자재를 대학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고, 대학 건물은 총장들이 구걸하다시피 기업의 기부금을 얻으러 다녀야 한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할 때 대학에서 대응자금을 내놓아야 지원한다고 하여 대학간의 경쟁만을 무책임하게 부추긴다. 대학의 이공계 실험실은 고등학교의 실험실만 못 하고, 실험장비 또한 많은 대학들이 과학고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지방의 작은 고등학교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수영장이 건립되고 있지만 대학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대학강사들은 박사학위까지 가진 대학원출신들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초등학교 교사들보다 못한 사회적 낙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투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재인식해야 한다. 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의 여건을 보고 대학의 교육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면서 대

학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나 사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대학 자체의 문제라고 내버려두고 있는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대학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획기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연구비의 확충이 해당된다. 이 또한 균등한 배분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재정지원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으로 먼저 세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세제는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는 마치 기업에 대한 세제처럼 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일반 기부금과는 달리 국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처럼 전액을 인정해주는 세제로 바뀌어야 한다. 심지어 정치자금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하는 십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같은 차원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경비를 30%까지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60%까지 간접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고,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도 50% 이상 인정해주는 것을 볼 때 13% 수준의 간접경비 인정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에 요구하는 대응자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대폭 증대되고 있는 연구비에 비해 대학에서 연구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마련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수도, 전기요

금에 대한 혜택을 대학에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몇 년전 영화를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대학도 이제는 산업체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폐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억 원의 건물을 건축하면 대학은 건설비에 덧붙여서 대학이 최종 소비자라고 하여 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러한 세제는 바뀌어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집행되는 경비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는데 교수들의 봉급에 대해서는 연구 및 교육활동에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 인정해주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전에는 봉급의 50%를 연구비로 인정해 주고, 연구비에 대해서는 모두 경비로 인정되다가 이제는 연구비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인정비율을 낮추어서 최근 15% 수준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컴퓨터에서 책장, 서적, 문방구 등 모든 경비를 자신의 봉급에서 지불하고 있고, 학생들의 지도 등에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자영업자나 대기업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수준 정도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개 대학이나 대학교수가 금전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문화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수인력들이 대학교수보다는 기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또 다른 세제 혜택으로는 대기업들이 대학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변화이다.  
 현재까지는 대학입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 대학교육이나  
 대학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것이다.  
 국가의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최종 출구이고, 지식생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다. 산학협동을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은 전무하고 기업의 대학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나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의미만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위해 대학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지식생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에 대한 투자와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대학의 등록금이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여건과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책정은 자율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지도나 총학생회의 인상반대 투쟁은 대학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원 확보율의 강화에 따른 교수신규채용의 증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관리 운영비의 증대 등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등록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외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을 대폭 증가시켜 균형적인 학습기

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외국과 같이 졸업생들에 의한 대학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이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재정 확충을 통해서만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변화이다. 현재까지는 대학입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 대학교육이나 대학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것이다. 국가의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최종 출구이고, 지식생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염재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筑波大學 국제 시스템 특별 프로젝트 외국인교수, 호주 Griffith University 객원교수, 과학기술부 기관평가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공기업 등 경영점검·평가단 위원, 16대 대통령선거 토론회 사회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기획예산처장 및 국제교육원장을 맡고 있다.